



독일과 EU, 구제기금 확대 논쟁

이정환 선임연구원

- 3월 30~31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동 재무장관들이 유럽의 재정 위기 전이를 막기 위해 구제기금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유럽중앙은행(ECB)의 장기대출 프로그램(LTRO)에도 불구하고 스페인¹⁾과 포르투갈 국채수익률의 상승세 지속으로 유로존 각국은 재정위기 상황이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데 공감하고 구제기금을 확대하기로 결정함.
- 그동안 구제기금 확대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독일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구제기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규모에 대해서는 EU집행위원회와 의견을 달리한다고 밝힘.
 - 메르켈 독일 총리는 한시적 기구인 EFSF(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와 이를 대체할 상설기구인 ESM(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을 당분간 병행 운영할 경우 EFSF의 기금 잔액인 2,000억 유로를 합해 구제금융기금은 총 7,000억 유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힘.
 - 아울러, 독일은 “시장에 대출을 확대하고 구제기금을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고수하면서 7,000억 유로 이상의 구제기금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함.
 -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제기금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남유럽국가들이 재정위기를 벗어날 수 없음.
 - 더욱이 구제기금은 2012년 1월 S&P가 EFSF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신뢰에 타격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AAA’ 신용등급 국가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경제가 부진하면서 구제기금에 대한 신뢰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구제기금의 역할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1) 스페인은 ECB 대출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주 동안 10년물 국채수익률이 5%를 상회함. 한편, 스페인 은행들의 국채매입이 증가한 것은 장기대출프로그램(LTRO)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상황이 변동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채매입 증가 기조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반면, 구제기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유럽집행위원회는 독일이 주장하는 규모 이상으로 구제기금이 확대되어야 동 기금이 재정위기 전이의 방화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

- EU는 구제기금이 유럽 재정위기 전이에 대한 방화벽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구제기금이 9,400억 유로에 달해야 한다고 주장함.
- EU가 독일 주장 이상으로 구제기금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는 다른 이유는 유럽의 구제기금 규모가 IMF의 구제기금 규모를 결정짓기 때문임.
 - EU의 구제기금이 최소 9,400억 유로를 상회해야 IMF가 유럽 구제기금과 회원국들의 분담금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OECD는 금융시장 붕괴 우려 없이 유로존이 구조개혁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최소 1조 유로 이상의 구제기금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면서 유럽집행위원회의 주장에 힘을 실어줌.

- OECD 사무총장 Gurria는 구제기금 규모가 시장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유로존 각국이 경제성장 및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주장함.
-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구제금융 수혜국의 재정상황에 대해 안도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인데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금융시장 안정에만 1조 유로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제기금이 최소 1조 유로 이상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
 - Wall Street Journal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경우 은행의 자본확충 등을 위해 향후 2년간 최소 1조 2,000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함.

(Financial Times, Wall Street Journal 등, 3/27)